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제출연월일 : 2003. 10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산림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휴양림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을 점·사용허가 하여야 할 경우,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 할 시설의 종류를 규정 함(안 제4조).
- 다.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 일반경쟁 입찰원칙으로 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안 제5조).
- 라. 휴양림 시설 사용인의 행위제한 및 허가 취소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제7조).
- 마. 휴양림 시설 사용료 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8조).
- 바. 허가등의 취소시 점·사용료의 반환 및 점·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 당시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허가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관리대장 비치와 휴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2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3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 자연휴양림조성·관리및운영요령(산림청 예규 제489호)

나. 규제관련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필(2003. 10. 8)

다. 관련·실과 협의 : 지적과 협의하였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3. 8. 8 ~ 2003. 8. 28 / 의견없음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산림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 현장책임자”라 함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관리·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용인”이라 함은 휴양림안의 토지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자를 말한다.

제3조(점·사용허가) 시장은 휴양림안에서 토지 또는 시설일부에 대하여 점·사용허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고자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시장은 효율적인 휴양림관리를 위하여 휴양림안의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선정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식당·매점 및 식음료 판매시설(자판기)등으로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 하는 시설사용료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점·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허가등을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허가등을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허가등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의 취소·사용정지처분,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위반 하였을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로 입은 사용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등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점·사용료 징수방법)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점·사용료를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점·사용료 등의 반환)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때에는 기 납부한 점·사용료에 대하여는 취소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점·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허가등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등의 취소로 인하여 점·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등) 시장은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점·사용목적, 허가기간, 면적, 사용물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휴양림 시설의 안전조치)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외의 사항은 산림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대전광역시세부과징수규칙 및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11. 7.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0. 27,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3. 10. 28.

다. 상 정 일 자 : 제1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3. 11. 7)

상정,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국장 조찬호)

1. 제안이유

산림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휴양림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을 점·사용허가 하여야 할 경우, 지방재정법,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관리 할 시설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 일반경쟁 입찰원칙으로 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안 제5조).
- 라. 휴양림 시설 사용인의 행위제한 및 허가취소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정함(안 제8조).
- 바. 허가 등의 취소시 점·사용료의 반환 및 점·사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당시 원상태로 반환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허가 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관리대장 비치와 휴양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본 조례안은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안임.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1991년 5월 10일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으며, 2002년 2월 26일 우리시가 42억 2천만원에 경매 낙찰되어 지난해 9월에 재산을 인수하고 본 휴양림에 대하여 정비·보완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휴양림안에서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 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휴양림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민간인에게 식당·매점·식음료 자동판매기 등을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용인의 행위 제한규정을 두고, 위반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취소할 때에는 미사용기간은 일할계산에 의하여 점·사용료를 반환토록 하는 내용임.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